

## 80年代 韓國經濟의 鳥瞰圖

李 啓 民

〈韓國經濟新聞政經部記者〉

韓國經濟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무척 우매한 질문 같으면서도 쉽사리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다.

요즈음 과거의 고도성장정책에 대한反省의 소리가 높다.

「漢江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떠들어대던 것이 었그제였다. 先進國의 문턱에 와 있다고도 했다. 일부에서는 선진국 그룹인 OECD(經濟協力開發機構)에 가입해야 한다는 論議도 일어났다. 한참 「경기 좋은」시절의 착각이었다고나 할까 망발이었다고나 할까...

그만큼 「幻想」속에서 살아왔다고 말한다면 너무 심한 표현이기는 하나 전혀 틀린 얘기라고 일축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萬年 후진국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한 발짝 뛸때 우리는 두발짝을 뛰어야만 한다는 것이 과거 정책 당국자들의 思考의 밑바탕을 이뤄왔다.

貧困의 악순환을 탈피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한 귀결이었으며 피치못할 길이기도 했다.

이러한 성장전략의 채택이 많은 성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이래 國民所得이 크게 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세계의 中進工業國家로 성장한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던 62년에 비해 1人當 GNP가 지난 해에는 1천5백3달러로 경사가격으로는 17배, 실질성장으로는

3배가 늘어났다. 5천만달러에 불과하던 輸出이 1백70억달러를 넘어섰고 전체 産業에서 차지하는 鑛工業의 비중이 8.7%에서 22.6%로 늘어나기도 했다.

오일쇼크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하에서도 지속적인 수출증대와 높은 成長率의 유지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開途國의 모범생」이라는 칭찬을 들을 만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成果를 달성키 위해 우리는 너무 自身을 모르고 뛰기만 했다. 조그만 상처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직 目標 달성만이 最善이었다. 때문에 이러한 조그만 상처들이 제때에 치료되지 못해 지금은 큰 상처가 돼 곪아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高度成長에 치중함에 따라 인플레이의 昂進은 資源배분을 歪曲시켰고 國民經濟 체질을 약화시켜 놓았다. 黃金萬能 내지 拜金主義의 팽배로 國民精神의 황폐화를 초래했다.

政府主導의 目標指向的인 개발전략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展示的 증복, 과잉투자과 각종 인허가에 의한 규제,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輕視하고 目標에 집착하는 개발전략은 갖가지 非能率을 초래했다.

산업간 또는 경제 각 부문간의 不均衡 심화는 內生的이고 自立的인 발전의 기틀을 약화시켜 놓았다. 말하자면 화려한 껍데기 成長에 비해 속은 많이 비어 있다는 것이 과거를 보는 우리들의 눈이다. 이런 관점에서 껍데기 성장보다는 이제 속을 채워넣는 개발전략이 필요하다는게 최근에 제기된 경제전략에 대한 論議의 쏠림이자 그 전부이기도 하다. 더우기 제5공화국이 새로 탄

생했다.

80년대가 시작됐다. 극심한 不況을 겪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제5차 5개년 계획이 실시된다.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들이 과거 경제전략을 반성하고 새로운 戰略의 수립을 강요하는 時代的 分水령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 국내의 경제여건이 다같이 어려움 투성이다. 70년대의 세계경제를 멩들게 했던 石油은 아직도 가격이나 물량면에서 불투명한 요인들을 너무 많이 안고 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갈수록 심해진다. 물가를 잡기위한 노력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여서 세계 경기가 60년대마냥 급속한 회복과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여건도 마찬가지다.

건국이래의 정책과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의 단절이라는 큰 命題가 한국경제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으며 매년 새로 늘어나는 45만 여명의 경제활동인구를 흡수해야만 하고 누적되는 國際收支赤字를 메꿔나가야 하며 社會福祉의 확충이라는 새로운 命題가 國家目標로 제시돼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대부분 서로 相衝되는 목표이기도 하다. 이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셈이다. 특히 산업정책은 지난 70년대 고도성장과정의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새로운 産業政策의 전개는 韓國經濟의 제2跳躍을 위한 밑바탕을 이룬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80년대의 경제시책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경제운용방식을 종래의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정부주도에 의해 운용돼 왔다. 산업정책이나 재정금융정책 또는 무역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필요이상의 규제나 보호를 펴왔으며 지원시책을 강구해 왔다. 경제활동의 거의 모든 분야에 정부의 입김이 닿지않는 곳이 없었다. 이로 인해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非能率이 만연되고 기업체질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가뜰이나 모자라는 資源의 配分이 歪曲되기도 했다.

정부주도의 재정금융시책은 특정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이 집중되는 特惠金融의 素地를 만들어 놓았으며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정부지원에 의존하려는 허약한 기업체질을 형성시켜 놓았다.

우리나라의 금융자금지원중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총민간여신증에서 수출금융등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1.1%로 절반을 넘는다. 총 은행대출금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9.6%로 수년동안 40%선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의 재무구조는 취약하기 그지없다. 자기자본 비율은 지난해 17%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83%는 他人資本에 의존하고 있다. 기업집중이 심화되고 分配구조가 악화된 것도 경제가 스스로의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굴러왔다기 보다는 정부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끌려왔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때문에 정부기능을 재정립하고 민간의 창의를 존중하는 민간주도형 경제운용전략이 시급하다. 保護의 온상이 서서히 철거되어야 하고 통제와 지원으로 歪曲된 시장기능의 活性化가 필요하다. 市銀民營化등 金融自律化의 촉진과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公正去來法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정부는 경제정책의 進路와 案内者역할에 그쳐야 한다. 균형된 산업구조의 재정립도 80년대 과제중의 하나다. 지난 70년대의 중화학 우선정책은 여러가지 면에서 많은 歪曲현상을 초래했다. 중화학에 대한 중점지원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生必需品이나 농업기반 취약으로 인한 國民生活物資의 不足현상도 나타났다.

지난 76년부터 79년까지 실시된 총체조업에 대한 투자중 중화학부문이 77%에 달하고 있으며 경공업부문은 그 나머지인 23%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重化學投資 편중현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중화학은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고 생산효과가 늦게 나타난다. 때문에 그동안의 중화학에 대한 집중 투자는 생산이 뒷받침되지 못해 인플레이 유발의 원인이 되었으며 일부 산업은 중복투자등

시행착오까지 일으켜 자원의 낭비를 가져왔다.

이같은 불균형성장의 폐해를 시정하고 새로운 산업기반구축이 급선무다.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의 균형적 육성을 통해 成長만이 아닌 發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重化學의 육성보다는 이미 벌려놓은 중화학사업에 대한 마무리 작업이 선행돼야겠다. 중소기업은 고도산업사회 건설의 礎石이 된다.

중화학업체와의 系列化를 통해 안정적인 部品 공급을 담당함으로써 共存共榮하는 기틀이 돼야 한다. 中小企業은 대부분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서 社會安定帶 역할을 한다.

農業기반의 확충은 人間生活의 밑바탕인 食生活의 해결수단이다. 식량확보없이 경제성장 자체가 무의미하다. 특히 농산물의 안정공급기반이 없이는 최대과제인 物價安定을 이룩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지속적인 수출증대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과제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국내시장이 협소한 우리로서는 해외시장을 겨냥할 수 밖에 없다. 수출은 국내기업간의 경쟁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다. 국제경쟁력의 강화가 시급하다. 이밖에도 앞으로 韓國經濟가 해결해야 될 산업분야의 과제들은 수도룩하다. 민간주도에 의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나 기업재무구조의 개선등은 기본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오는 82년부터 시작되는 5차 계획의 기본이념은 이같은 과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제5차 5개년 계획은 安定·能率·均衡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늘어나는 경제활동인구를 흡수하기 위해 성장을 추진하면서도 물가안정을 이룩하고 成長의 혜택이 골고루 배분되고 산업간·지역간·계통간·부문간의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기본정책 방향으로는 ① 수출증대의 지속과 개발정책의 적극화 ②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산업의 육성 ③ 시장경제의 창달을 통한 능률 향상 ④ 物價安定 ⑤ 기본 수요충족과 사회개발의 확충등 5개 항목이 제시돼 있다.

5차 계획기간중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7.5%, 도매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9.0%로 잡혀있다.

經常收支는 오는 86년에 38억 달러의 赤字가 나타날 것이나 그 폭은 금년의 55억 달러보다 다소 줄어들게 된다. 수출은 연평균 11.9%씩 증가, 86년에 5백 27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수입은 연평균 8%씩 증가, 86년에 5백 60억 달러로 높아질 것으로 계획돼 있다.

5차계획의 특징은 物價安定에 대한 정책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개발투자보다는 교육혁신등 社會開發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총 재정투융자사업중 사회개발투자 비중이 지난 4차계획기간중의 23.0% 보다 5.5% 포인트가 높은 28.5%까지 책정한 것은 제5공화국의 국가목표인 福祉國家의 건설을 위한 정책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産業政策은 정부의 선택을 될수록 지양하고 경쟁력에 의한 自律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을 기본으로 素材産業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비교우위산업 구조로의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石油化學·鐵鋼·非鐵金屬등 素材産業은 계획기간중 경쟁력과 고용효과를 감안해서 무리한 사업추진은 억제하되 공급의 안정확보차원에서 자금조달 능력이 허용하는한 自主自給率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계획되고 있는 제2제철의 건설도 제1기공사를 오는 87년으로 늦추기로 했으며 에틸렌기준 年産 35만톤 규모의 제3石油化學團地 건설도 1단계(82~85년)와 2단계(86~88년)로 나눠 추진토록 했다. 그러나 비교우위가 높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電子, 기계, 造船 등의 산업은 수출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延拂輸出資金을 확충하고 中小部品工業을 적극 육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섬유공업등 기존의 경공업은 품질향상과 기술개발등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로 계속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 및 人力개발과 산업지원 시설의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이는 産業의 質的 高度化를 의미하는 것이다. 5차계획기간중 새로운 京釜고속철도의 건설을 비롯 海運항만시설의 확충, 産業立地의 조성등이 계획되고 있다.

산업지원시책에 있어서는 종래의 개별업종 중심

의 특정산업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모든 산업에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개편할 방침으로 있다. 무역정책에 있어서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개방정책의 실시가 불가피하다.

成長의 원동력으로서 수출증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수입자유화를 오는 86년까지 9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욕이다. 수출구조에 있어서는 86년에 총 수출의 95%를 工産品으로, 그리고 工産品중에서 60.2%를 중화학제품이 말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선박, 차량을 포함한 기계류 수출은 5차계획기간중 연평균 40.7%씩 늘어 오는 86년에 1백 16억 달러(81년 不變價格기준)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같은 5차계획 내용은 아직도 확정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수차례의 검토 등을 거쳐 오는 8월께나 확정된다. 그러나 그 골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5차계획의 추진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인가. 누구도 자신있는 답변을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수많은 어려움이 닥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답변일지도 모른다.

우선 정책기조에서부터 어려움은 內在해 있다.

物價安定에 정책운용의 최우선을 두겠다고 했다. 모든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있어서 物價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겠다는 것이 정책당국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高度成長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책목표의 하나가 되고 있다.

계속 늘어나는 경제활동인구를 흡수하고 국민복지의 원천인 소득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결국 安定과 成長의 조화정도가 목표의 關鍵이 될 것 같다. 5차계획기간중 연평균 換率引上幅은 단 1%로 전제돼 있다. 物價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輸出主導의 성장의지가 담겨져 있으면서도 수출시책의 주요정책변수인 換率을 거의 固定시키 다시피 계획된 것은 비현실적인 假定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물가가 안정되면 그만큼 換率引上의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는 예상되지만 너무 빠듯한 前提라고 느껴진다.

5차계획은 대체로 社會開發에 역점이 두어지고 있다. 4차계획까지만 해도 단골과제로 등장하던 重化學工業의 육성은 이번 정책목표에서 빠져 있다. 重化學工業육성은 포기할 것인가. 물론

80年代 우리經濟의 모습

<表-1>

	單位	'81	'86	'88	'90	年平均增加率(%)	
						'82~'86	'87~'90
G N P							
不變經常	億 弗	609	874	1,001	1,146	7.5	7.0
1人當 G N P							
不變經常	弗	1,569	2,076	2,305	2,566	5.8	5.4
投資率(經常)	%	32.0	32.9	33.0	33.1	-	-
國內貯蓄率(“)	“	22.9	29.6	31.5	33.5	-	-
商品輸出(“)	億 弗	205	527	744	1,050	-	-
實質增加率	%	10.4	12.2	10.1	10.0	11.9	10.0
商品輸入(經常)	億 弗	260	560	761	1,035	-	-
實質增加率	%	8.7	9.7	7.9	7.9	8.0	8.0
經常收支(經常)	億 弗	-55	-38	-18	17	-	-
GNP디플레이터上昇	%	20.0	8.0	8.0	8.0	10.0	8.0
都賣物價上昇	“	20~25	7.0	7.0	7.0	9.0	7.0

〈表-2〉 輸出 전망 (經常, 億弗)

	80	81	86	88	90
總輸出(A)	175	205	527	744	1,050
重化學輸出(B)	75	92	290	433	643
(B/A%)	(42.8)	(44.4)	(55.0)	(58.2)	(61.2)
延拂輸出(C)	4	9	40	61	102
(C/B%)	(5.3)	(9.8)	(13.8)	(14.0)	(16.0)

정책목표에서 빠져 있는 것이 곧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論議돼온 重化學工業육성의 폐해는 정책방향의 잘못보다는 시행과정의 오류에서 연유된 것이다. 중화학공업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우리에게 불가피한 命題가 되고 있다. 다만 모든 중화학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들거나 사업성을 무시한채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무리하게 추진하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오는 86년 수출목표중에서 工産品의 60% 이상을 중화학제품으로 충당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중화학육성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과거와 같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중화학공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의 개선이 중요할 것이다.

종래와 다를 것 없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輸出增大 시책이다. 外延的 成長위주의 수출시책은 그대로 지속돼야 하는가에도 異論의 여지는 많다.

輸出目標을 채우기 위해 出血輸出이 성행하는 것은 잘못돼 있는 것이다. 국내시장에서 엄청난 이익을 올려 수출로 생긴 결손을 보충하는 것도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이는 모두가 輸出의 外延的 成長에 치우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보다 「실속있는 輸出」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출지원시책을 수출금액보다는 가득를위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수출산업의 內實化를 위해서는 국제비교우위에 입각한 輸出特化産業의 육성도 바람직하다. 內需市場의 회생을 바탕으로 한 정책지원에 의해 수출을 늘리기보다는 상품의 품질과 가격 등 국제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수출증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중화학제품의 수출증대에 따라 延拂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억달러에 불과하던 延拂수출규모는 86년에 40억달러로 10배가 늘어날 전망이다. 延拂수출은 자금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벌써부터 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延拂輸出資金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이에 따른 物價압력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단기 수출금융보다는 延拂수출지원에 수출금융의 중점이 뒤져야 한다는데는 異見이 없다.

우리가 안고 있는 갖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은 모두가 生産性向上으로 귀결된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혁신이 있어야 한다. 품질과 급화가 이뤄져야 된다. 원가절감도 절대적이다. 경영합리화도 필요하다.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리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노후시설의 개체등 시설근대화 노력도 필요하다. 새로운 勞使協力관계의 개선은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 기업가의 창의와 책임경영자세의 확립이 뒷받침된다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된다.

이러한 민간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선행조건이기도 하다.

기업의 창의를 살릴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보호를 과감히 제거하고 행정의 능률화를 확립해야겠다.

정부는 종래의 命令經濟운용의 자세에서 탈피하여 市場經濟의 안내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